

2015

수시과제-5

I S S U E P A P E R

##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수행과제명 •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과제책임자 • 주재선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수행과제명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과제책임자  주재선 연구위원

 Tel: 02-3156-7192

 e-mail: jjs2000@kwidimail.re.kr

### 요약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지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가정 양립, 건강과 교육 분야 46개 지표를 분석함. 분석결과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진단하고 국무회의와 부처 협의 자료로 활용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주재선·김영란·김난주(2015).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배경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 전략, 140개의 국정과제를 설정함.
- 여성정책 분야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을 목표로 하여 총 12개의 국정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특히 12개의 국정과제 중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은 집중관리과제로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 여성 분야의 국정과제는 다시 55개의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되면서, 여성정책의 추진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측정할 지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청와대와 여성가족부는 2013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를 개발하게 됨.
- 지표체계는 여성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국제성평등지표, 여성 지위를 보여주는 기본지표 등을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축 되었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가정 양립, 건강과 교육 등 5개 분야 46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 본 연구는 2013년 작성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46개 지표에 대해 변화와 특징,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파악 하며, 연구결과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여성정책 진단과 부처와의 협의 자료 및 각종 위원회 안전에 활용할 목적을 가짐.

## 2 조사 및 분석결과

###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개발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의 개발은 2013년 3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점검하고 변화를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시작됨. 지표의 개발은 BH 경제금융비서관실 주재로 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구성하고 BH 주재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안을 작성함.

〈표 1〉 지표 선정 과정

일시	추진내용
'13. 3	대통령의 여성의 지위사례 발굴과 지표화 언급
'13. 4~6	BH 경제금융비서관실 주재로 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구성
'13. 6~8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가족 양립 등 4개 영역에 대해 지표체계 초안 구성 영역별 자문회의 개최(3회 개최) 영역별 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해 지표 선정 작업 진행
'13. 9	지표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양성평등 TFT 개최 지표 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미생산 통계 생산방안 협의
'13. 10~11	미생산 통계 생산방안 추가검토 및 지표 보완 이에 영역은 4개영역에서 5개영역으로 수정개편. 즉, 기존 4개 영역에 건강과 교육 영역을 추가하여 총 46개 지표를 체계화 함.
'13. 12	5개 영역 46개 지표의 필요성, 정의 및 산식, 자료원, 관리부처 등을 정리하고 영역별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실시하여 TFT 보고서로 제출함. 영역별 지표체계는 기본지표와 점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표구성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의 분석을 실시할 목적으로 선정되었음. 첫째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 여성의 지위

변화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국제기구에서 측정되고  
성평등지수를 개선 및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지표체계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가정양립, 건강과 교육  
등 5개 영역별 46개의 관리지표로 구성됨.

〈표 2〉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점검 지표 현황

영역	총 관리지표	기본지표	점검지표
경제활동	12개	5개	7개
의사결정	10개	5개	5개
안전	8개	4개	4개
일·가정양립	9개	4개	5개
건강과 교육	7개	2개	5개
전체	46개	20개	26개

●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는 여성정책의 점검과  
국무회의 등의 주기적 보고를 위해 핵심지표 15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반기별 분석 가능한 8개 지표의 경우 년2회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국무회의 등의 보고 자료로 활용함.

〈표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점검 핵심지표 현황

영역	핵심지표
경제활동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30대 여성 고용률, 전문직 비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유사업무에서의 남녀임금수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
의사결정	관리직 여성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일·가정양립	출산휴가 사용건수,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현황, 직장보육 시설 의무 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 영역별 지표의 변화 분석 : 전년대비 변화

영역	지 표	'14년		전년 대비 증감	'13년
경제 활동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51.3%	1.1%p	50.2%
		남성	74.0%	0.8%p	73.2%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39.9% (남성 26.5%)		△0.7%p (△0.7%p)	40.6% (남성 27.2%)
	성별 임금 격차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67.0%		△1.1%p	68.1%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여성	168.9시간	△0.9시간	169.8시간
		남성	179.8시간	0.1시간	179.7시간
	성별 청년층 고용률	42.5% (남성 38.9%)		1.2%p (0.8%p)	41.3% (남성 38.1%)
	30대 여성 고용률	56.3%		0.8%p	55.5%
	기혼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	40.1%		-	-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율	국민연금	38.6%	0.0%p	38.6%
		건강보험	42.6%	△0.5%p	43.1%
		고용보험	42.6%	1.1%p	41.5%
	전문직 여성비율	47.0%		0.6%p	46.4%
	추정소득에 대한 성비(US \$)	0.48 (19,395\$)		0.04 (1,723\$)	0.44 (17,672\$)
의사 결정	관리직 여성비율	11.1%		△0.3%p	11.4%
	국회의원 여성비율	16.3%		0.6%p	15.7%
	지방의회 여성비율	22.9%		2.6%p	(‘10년) 20.3%
	장·차관급 여성비율	6.2%		△1.0%p	7.2%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16.8%		1.2%p	15.6%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13년) 37.8%		0.2%p	(‘12년) 37.6%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4.5%		0.1%p	4.4%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3년) 13.92%		2.37%p	(‘12년) 11.55%
	민간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3년) 19.19%		1.23%p	(‘12년) 17.96%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31.7%		4.00%p	27.7%

영역	지 표	'14년		전년 대비 증감	'13년
안전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인식 비율	29.3%		△1.2%p	(‘12년) 30.5%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피해자 여성비율	(‘13년) 84.9%		△0.1%p	(‘12년) 85.0%
	성폭력(강간)발생건수 (여성피해자 비율)	(‘13년) 26,915건 (92.4%)		5,569건 (△2.9%p)	(‘12년) 21,346건 (95.3%)
	가정폭력 처리인원	(‘13년) 19,561명		11,464명	(‘12년) 8,097명
	아동대상 성폭력 피해자 (강간과 성추행 피해자)	(‘13년) 775명 (청소년 1,830명)		172명 (560명)	(‘12년) 603명 (1,270명)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5.4%		△1.0%p	6.4%
	가정폭력 재범률	11.1%		△0.7%p	11.8%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수 (상담소+지원보호시설)	성폭력	201개소	8개소	193개소
가정폭력		270개소	4개소	266개소	
성매매		91개소	3개소	88개소	
알가정 양립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보육대상 아동 대비 시설 아동비율	보육시설	43,742개소	△28개소	43,770개소
		6세 미만 아동 중 시설아동 비율	54.6%	0.9%p	53.7%
	성별 가사노동시간 * 20세 이상	여성	208분	△39분	(‘09년) 247분
		남성	47분	1분	(‘09년) 46분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자 수	88,756명		△1,751명	90,507명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계	76,833명	7,217명	69,616명
		여성	73,412명	6,089명	67,323명
		남성	3,421명	1,128명	2,293명
	육아휴직 사용률	자녀연령 12개월 이하	(‘13년) 62.3%	4.6%p	(‘12년) 57.7%
		자녀연령 36개월 이하	(‘13년) 28.6%	3.0%p	(‘12년) 25.6%

영역	지 표	'14년		전년 대비 증감	'13년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이행률	('13년) 81.7%	7.4%p	('12년) 74.3%
		보육시설 설치율	('13년) 49.7%	10.6%p	('12년) 39.1%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 *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을 비율	('12년) 72.2%		2.2%p	('11년) 70.0%
	GDP 대비 보육재정비율	보육재정	('13년) 121,887억원	35,042억원	('12년) 85,845억원
		보육재정 비율	('13년) 0.9%	0.3%p	('12년) 0.6%
건강과 교육	평균수명 성비	('13년) 85.1세		0.5세	('12년) 84.6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9.9%		0.6%p	89.3%
	모성사망비	('13년) 11.5		1.6p	('12년) 9.9
	청소년 출산율	('13년) 1.7		△0.1p	('12년) 1.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6.8		△1.2p	108.0
	고등교육 졸업자의 여성비율	49.1%		0.5%p	48.6%
	초중고 교장·교감 여성비율	27.6%		2.5%p	25.1%

### 3 정책제언

#### 제안 1)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 ■ 유사업무에서의 남녀임금격차

- 통상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 임금 보다 낮아 남녀 격차가 발생함.  
임금 수준은 근속년수, 경력, 맡은 직무, 직위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됨. 이 중 임금 수준 결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급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근속, 경력이 모두 반영된 결과



이기 때문에 동일 직급에서의 남녀 임금 비교는 남녀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임금 격차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직급”은 회사마다 다른 명칭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표준화된 “직급” 기준이 없어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임. 동일 직급에 대한 임금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하므로, 유사 업무를 직급이 아닌 직업(종)과 경력년수를 이용하여 남녀임금수준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함.
- 통계생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며, 직종 및 경력년수별 임금성비를 산정함.

#### ■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짐
-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1차) 비정규직 근로자 약2만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2012년 10월(9차)까지 추적하여「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를 발표하였음. 그리고 2013년 패널대상자를 임금근로자로 확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을 모두 추정할 수 있게 재설계하여 2015년까지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이에 이 지표는 2016년 본조사가 완료된 후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성별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수

-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수는 2013년 정책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계생산이 되지 않고 있음. 2013년 부처간 협의TF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 수정을 통해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통계의 용어 정의가 명확히 없고 현재 시간제가 비정규직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조사표 수정을 통한 생산이 불가능함을 전달해 왔음.

- 단, 고용노동부는 통계 생산방안에 대한 단기대안과 장기대안을 제안했고 관계부처의 협의로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를 대체 지표로 통계 산정, 법률 제정 후 “정규직 시간선택제” 생산방안을 재협약하기로 확정함.
-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년 주기로 생산하며 생산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방안
단기대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또는 “순수 시간제근로자” 통계를 활용
장기대안	시간선택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수립되면,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생산방법에 대한 협의

## 제안 2) 지표체계 개선 제안

영역	기존	개선 안	사유
경제 활동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고용률	여성 고용률 70%로드맵, 관리지표 모두 고용률로 관리되고 있음. 성별경제활동 참가율은 보조지표로 활용
	추정소득에 대한 성비	삭제 혹은 별도관리 필요	GGI 관련 지표로 포함된 지표이지만 이 지표가 경제활동, 임금성비 등 기존 지표와 연계해서 추정되는 지표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음.
일·가정 양립	-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추가 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직장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sup>1)</sup> 임. 현재 통계청의 일·가정양립지표 중 하나임.

1) 통계청(2015.5.10.). e-나라지표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관련용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5)에서 2015.5.10. 인출.

영역	기존	개선 안	사유
건강과 교육	건강수명 성비	기대수명 성비	건강수명은 WHO 등 국제기구와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통계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통계 주기가 불규칙하며, 추계된 통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 기대수명은 통계청에 정기적으로 생산관리 되고 있는 통계임.
	건강과 교육 영역	지표체계에서 제외 후 별도관리	건강과 교육영역은 국제성평등지수인 GGI와 GII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본 지표체계내에서 보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안 3) 지표변화와 제언

####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정책의 관리가 필요

-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4년 8월 39.9%로 전년동월 대비 0.8%p 하락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14년 4,8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53.5%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을 보면, '14년 국민연금 38.6%, 건강보험 42.6%, 고용보험 42.6%로 여성정규직(각각 76.7%, 78.0%, 75.8%)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관련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고용시장은 남성에 비해 훨씬 악화되어 있음. 이에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하며, 사회보험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안전지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안전영역은 박근혜 정부에서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 불량 식품) 척결이라는 의지와 함께 많은 정책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임. 하지만 지표변화를 보면 폭력예방 시설 인프라 등 일부지표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의 적극 추진에 의해 약간 하락하지만,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와 건수는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사회안전인식 또한 2014년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 안전 지표들의 악화 원인은 의식 변화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신고 활성화 때문이기도 하나, 최근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를 무시할 수 없음. 여성 폭력에 대한 증가는 사회안전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력관련 전반적 지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3 기대효과

- 경제활동, 의사결정, 일·가정양립, 건강과 교육 분야에 대한 변화 분석에 대해 부처 및 각종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
- 주요 분석결과에 대해 국무회의 결과 보고
- 지표별 관련 여성정책 제고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BH 여성가족비서관